비민주적 군대 '동작그만'

기획특집

한국의 軍〈完〉— 적극적인 군생활을 위해

〈글 싣는 순서〉

1. 한국군에 대한 일반적 고찰
2. 군축 가능성과 실현방도
3. 군 민주화·중립화를 위한 노력
4. 적극적인 군 생활을 위해

군 변화 가능성 외면한 부정적 태도가 문제
주체의지 의한 배움과 실천의 장이어야

Ⅰ. 서론

1백75만의 대군이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20대 초반의 청년층 71%정도가 군에 복무하고 있고, 정부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군이 소비하고 있으며(전체예산중 약30%) 대다수 젊은이들의 고민의 주요한 한 부분이 군복무로 대표되는 병역의 의무임을 볼 때, 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 문화적으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군에 대한 관점도 각양 각색이다. 막연한 동경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열오감을 가지고 적대시 하기도 하며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불감증의 병을 앓기도 한다. 군사제도상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질로 인해 군에 대한 생각 대부분은 군입대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기 쉬운데, 이 글에서는 그동안 있어 왔던 군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몇몇 유형별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보고, 한국군의 현 모습을 고찰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군에 대한 바른 관점과 자세, 적극적인 군생활을 위한 바른 준비 모습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지난 3월24일 국회의원 선거시 청년층과 이지문 중위와 이원섭 일병을 비롯한 광범위한 병사들이 앞을 다투어 그림했던 군부재자 투표 무효의 실상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조차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선후배, 동료들이 몸담고 있는 군대의 실상에 다시한번 분노와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게다가 정의의 회복을 위해 용기있게 실상을 알린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해진 징계, 파면, 구속 등 각종의 불이익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은 여전히 굳게 닫힌 철옹성으로 남아있고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창군 이후, 4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민족의 번영과 자유로운 발전을 가능케 하는 보호 물리력의 자리를 박차고 부도덕한 정권의 시녀로서, 예속과 비민주성, 반민중성의 상징으로 나타나 국민의 군에 대한 생각을 두려움과 심각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올바른 군생활을 위해서는 군대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군의 비민주적·예속적 성격과 모습으로 인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지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나아가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까지고 한결같이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 군은 가서는 안될 곳이라는 사고이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시켜 군복무를 면제받거나 끝도 없는 도피생활을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둘째로, 군복무기간은 헛된 공백기간일 뿐이라는 사고이다. 군은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받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았댔자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다.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할 군에 대해 무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야할 군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막대한 물리력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하며 적극적 생활 준비를 하기보다는 남의 일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영장이 나오면 어쩌할 바 몰라 허둥대다가 친구, 선후배등과 술잔을 벌려놓고 패배적인 마음에 폭음을 일삼다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청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일 저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라, 군대나 가자'라는 식의 마치 군대를 도피처로 삼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소중한 2년여의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지름길이자 제대이후의 자신감있는 삶을 가로막게 되는 우둔 범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기주의적 자세이다. 군은 가기만하면 무조건 순응사고에만 시로잡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군의 민주적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이며, 운동가들에게 있어서는 민주변혁을 방기하는 기회주의에 다름아닌 것이다.

조국의 운명을 걸정지는데 중요한 일정을 하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군대를 신성한 국민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자기 발전의 장으로 삼아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점과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Ⅲ. 결론

40일 후의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은 군복무를 26개월로, 18개월로 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게 이 땅을 사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첫째, 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군의 현모습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자신의 군생활을 올게 정리·평가하여 후배들의 군생활속에서는 반드시 현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후배들 역시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고 필요한 서적을 통해 우리 군의 현주소를 바로 아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군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고 배움점이 있는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시인 박노해님의 "썩으러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처럼 집단노동의 신성함을 배우고 평등구조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세로 군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동료 친구들과 함께 집단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비록 우리를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는 군대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과 선후배가 가 있는곳이므로 또, 민주적 변혁의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참조적 노동과 그 생산물을 지키는 물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사고속에 군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올바른 군생활의 출발은 바로 지금 삶에서 부터이다.

서 영 완
〈윤석양후원시업회 조직부장〉

독자투고

정치인들의 술수와 불신

정치는 민심에 따라야 한다
철심·노심·박심… 국민은 점쟁이인가?

내가 알기로는 모든 국민이 점쟁이나 혹은 고도의 심리학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곤란하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의 정치행태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전국민으로 하여금 고도의 심리학자나 점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알수 없는 것이 있다. 다름아닌 속칭 '심'이라는 것이다. 요즘들어 부쩍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 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심' '김심' '박심' '이심'…. 거기다가 최근에는 추신시계까지 점지우지하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또다른 '김심'마저 등장했다. 민약 4천만이 정치를 한다면 '심'은 4천만개가 필요하단 말인가. 기막힌 일이다.

그러면 왜 항간에는 그러하게도 많은 심이 관찰이 하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심이 관찰서는 안되는가. 이유는 지방하다. 상식적으로 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따로 행동따로' 혹은, 했던 말도 '필요하면 뒤엎는'식의 불신을 조장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현대 민주주의제도하에서의 정치나 행정은 반드시 국민앞에 밝게 투명되어져야 하며, 그들의 정강이나 정책시행과정이 유리창처럼 환히 들여다 보여져 보편적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약 정부발표중 "올연말까지는 공공요금을 절대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올연말까지는 공공요금을 절대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영락없이 그는 바로 청맹과니가 되버리는 슬픈 과거가 있어왔다. 뿐만아니라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국교정상화를 이룩한 동구권과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과정에서도 엄마나 많은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던가. 이러한 모습들은 국가 장래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북한교섭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작, 실권을 맡은 부서는 허세로 전락하고, 필사니 특사니 하며 엄통한 곳에서 나타난 사람이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둘렀으며, 나아가 국가의 일급 또는 특급비밀 운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시종 변죽만 울리게 한 서글픈 기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근원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아무도 모를 -아니 귀신도 모를- 돈구름같은 소위 '심'이라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래 심이란 도덕성을 문제삼지 않게 되다보니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 동이 스스로 정당화되어 온갖 술수가 개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이 횡횡하는 한 '얼굴없는 그림자' '연막전술' '암통작전' '치고 빠지기' '김빠기' '물밑거래' 등의 숱한 수식어는 성행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분야에 탁월한 자만이 늘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많은 파업(?)을 담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비민주적이며, 민심만 교란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나아가 국론마저 분열시키게 하는 이러한 '심'이야말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없어져야 한다. '심'이 척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민주화는 요원하다. 이에 우리는 '심'의 실체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날카롭고 냉철한 눈초리로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언론 매체 역시 이러한 비민주적인 '심'이라는 단어를 근절시켜야 하며, '심'을 유포하는 사람에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준엄한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시는 분들, 듣기에도 우습고 혹세무민하는 온갖 베일에 싸인 심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정병 민'심'을 바로 아는 진'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 깊이 당부한다.

유 민 주
〈대학원석사4기·법학〉

독재정권 유지의 방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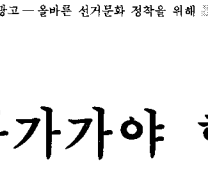
한때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되는 시절이 있었다. 물론 그 시절의 스승이란 권위는 일금, 아버지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한 국민학교 설문조사에서 34.1%의 학생들이 교사들의 존지 받는 모습을 볼 때 선생님들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욱이 요즈음 사회에는 선생님이라는 존침대명사 보다 'XX 선생'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87년 이러한 교육계의 폐단을 해결하려고 결성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금까지 해직교사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억압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경북지역 현직교사 5백40명은 '교육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는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화염은 피 말리는 입시지옥에 내몰려 꿈을 잃은 채 극적 불평등 퇴폐문화 속에 방황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해직된 동료의 복직을 바라는 서명한번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한다. 교육선언에 담긴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그리고 교육개혁 요구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정당하다.

교육개혁에 있어 선결과제는 전교조의 제도적 인정이다.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지위향상이나 교육의 정상화와 민주화는 이룩될 수 없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금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시대착오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 정권이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이 교육을 권력유지의 유력한 방편으로 삼아온 통치행태를 답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둔 각 정당들은 교육관련 공약에서 '입시 지옥 해소와 인간중심 교육개혁'(민자당), '교육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일어섭니다'(국민당)라는 주장을 펴면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갖고 있질 못하다. 민주당의 경우도 교원신분 보장, 6급 이하 공무원 노동2권 보장등만 제시할 뿐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인 전교조의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질 않고 있다.

지금의 교육제도가 현 사회에 비추어 볼 때 들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결과제를 차치하고 교육개혁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6공화국의 막이 내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권은 교육개혁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각 정당들도 공염불만 외울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에 있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졸업준비금 납부안내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졸업앨범과 기념품등은 업체와의 계약시에 기준 갯수를 1,400부(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 숫자는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1,400명의 졸업생이 졸업준비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졸업준비금 납부자는 1,400명에서 230명이 모자라는 1,170명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졸업앨범이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숫자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졸업준비금 납부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숫자를 넘지 못하여 제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납부한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준비금 납부장소: 신학은행 휘경동 지점
2. 졸업준비금총액: 57,000원
3. 기 간:92년11월20일까지
4. 졸업준비금 용지가 없으신 분은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학생회관 3층 인복위사무실)에서 용지를 드립니다.
5. 만약 기준부수(1,400)에 미달할 경우 졸업식 당일에 현장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판매는 절대로 앨범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졸업준비금 총액인 57,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

대학주보 기획 광고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제는 진솔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과장과 포장속에 커져가는 불신의 벽

선거때마다 수없이 뿌려지는 전단 가는 곳곳마다 널려 있는 공약들 선거당시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남발된 공약이 실제 사업속에서 실천되지 못함때 학생들의 '불신의 벽'은 커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공정선거로 '정의의 실천의 장'인 대학을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대 학 주 보 사